

노동정책연구
2008. 제8권 제3호 pp.93~124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 영국·독일·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김형기*

이 논문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가 무엇인지를 영국, 독일, 덴마크 3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전성, 유연안전성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노동시장제도 유형을 가진 세 나라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다. 나아가 OECD 주요국의 자료에 기초하여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호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노동시장제도가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Gini 계수 등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제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실업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도 높게 실시할 때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실현하는 노동시장제도 구축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구현하는 길임을 시사해 준다.

핵심용어 : 유연안전성, 고용보호, 실업보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논문접수일: 2008년 5월 29일, 심사의뢰일: 2008년 5월 30일,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5일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hkim@knu.ac.kr)

I. 머리말

오늘날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중대 문제에 직면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저성장 추세는 경기적 요인과 함께 성장동력의 약화에서 비롯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히 유연화되어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데도 사회보장제도는 아주 미약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 분열과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여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체제에 기초한 대안적 발전모델(alternative development model)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구촌 범위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체제와 대안적 발전모델 정립을 위해서는 그것에 적합한 상호보완적인 제도들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들 중 특히 노동시장제도는 성장체제를 구성하는 생산성 체제와 수요 체제의 핵심적 구성 요소이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중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제도에는 임금제도, 단체교섭제도, 해고제한제도와 같은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험제도와 같은 실업보호제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생산성과 소득분배 및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최저임금제도는 시장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수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를 막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노동시장제도들은 크든 작든 노동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협약임금은 임금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해고를 제한하는 노동법은 고용을 경직화시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인

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체시키고 투자를 저해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그 경직성을 타파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지한다. 특히 자유기업주의, 시장근본주의, 성장지상주의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신자유주의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지상의 과제로 되고 있다.

반면,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전화 혹은 경직화를 지지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통합을 강조하여 도입된 다양한 노동시장 제도들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나라들에서, 1980년대 이후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자-외부자로의 노동자들의 분할이 나타나 사회통합이 약화되는 현상이 출현하였다.

여기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전해야 하는가 하는 정책적 이슈가 제기된다. 미국처럼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경제성장은 잘 되지만 사회통합은 되고 있지 않으며, 독일처럼 노동시장이 안전한 나라는 사회통합은 잘 되고 있지만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는 ‘고성장-저사회통합’이, 노동시장이 안전한 나라는 ‘저성장-고사회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말하자면 ‘노동시장의 딜레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¹⁾이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되었다. Wilthagen & Tros(2004)에서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바 있는 유연안전성은 한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안전장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전략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제3의 길’로 주목받고 있다.

1) flexicurity를 ‘유연안정성’으로 번역하는 것은 그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할 수 없다. 영어의 security는 안정성이 아니라 보장이란 뜻을 포함하는 안전성으로 번역해야 한다. 영어의 stability가 안정성으로 번역된다. 내용으로 봐도 심한 변동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안정성이 아니라, 실업보호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생활의 보장이나 동태적 고용보장을 의미하는 안전성이란 말이 적절하다. 따라서 flexicurity는 유연안전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전성, 유연안전성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노동시장제도 유형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성과가 어떠한지를 서로 다른 발전모델이 구축되어 있는 영국, 독일, 덴마크 3개국의 노동시장제도 사례와 OECD 주요국에 대한 실증연구에 기초하여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제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발전모델 및 제도와 경제적 성과 : 분석방법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노동시장제도 혹은 노사관계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주로 코포라티즘의 효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사간 사회적 합의 체제인 코포라티즘이란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1980년대까지의 주요 연구 성과는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이 조직한 컨퍼런스의 논문집인 Labor Rela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에 집약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거버넌스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Schmitter(1990), 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서로 다른 효과를 분석한 Paloheimo(1990),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에서의 실업률의 차이를 분석한 Soskice(1990),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분권화가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Bowles & Boyer(1990), 노동시장 유연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Standing(1990)의 연구들은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들어오면 제도의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위기를 분석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경제분석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몇몇 이론 영역에서 나타난다. 제도주의 경제학,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 진화경제학, 공방시용 이론(convention theory)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 matters)’는 명제는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한다. 제도는 기술과 시장이란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미시적으로는 생산성(혹은 생산성 획득)과 소득분배(혹은 생산성 분배)

에 영향을 미치고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를 통한 조절이 축적 체제에 작용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강조하는 조절이론은 제도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기술과 조직 간의 공진화를 강조하는 진화경제학은 제도의 미시경제적 효과를 주목한다. Boyer(1988), Amable(1992), Lordon(1994) 등 조절이론가들이 체계화하고 있는 제도거시경제학(institutional macroeconomics)은 축적체제 개념을 중심으로 제도가 창출하는 내생적 동학이 성장과 위기를 초래하는 과정을 해명하고자 한다. Dosi(2000) 등 쾨방시용 이론가들은 생산체제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과 조직의 공진화 과정에서 조직 내의 제도들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면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시도들은 말하자면 ‘제도미시경제학(institutional microeconomics)’이라 할 수 있다.

제도거시경제학과 제도미시경제학의 방법을 결합하면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거시 및 미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²⁾. 그런데 하나의 발전모델에서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는 제도들의 집합이 존재한다. 즉 제도적 보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성 개념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제도적 보완성 속에 작동하고 있는 서로 다른 자본주의 발전모델을 비교분석하고 그 사회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가 최근 Hall & Soskice(2001)와 Amable(2003)에서 선구적으로 수행되었다.

Hall & Soskice(2001)는 노사관계시스템, 교육훈련시스템,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등의 차이에 따라 자본주의를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제도적 보완성 개념에 기초하여, 각국이 서로 다른 제도 패키지를 가지고 그것에 적합한 산업들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비교제도우위(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론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 패키지들의 경제적 성과가 서로 다른 산업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비교생산비에 따라 비교우위를 논한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을 넘어서서, 제도의 차이에 따라

2) 제도거시경제학과 제도미시경제학의 방법을 결합하는 것은 요컨대 중범위 수준(meso-level)의 제도를 매개로 해서 ‘거시의 미시적 기초’와 ‘미시의 거시적 기초’를 찾는 것이다.

비교우위를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³⁾.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서로 다른 발전모델에서의 노동시장제도의 차이,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 규제의 차이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 이루어진다. 먼저 Nickell(1997)은 고용보호,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조조직률, 단체교섭 등의 노동시장제도가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Iversen(1999)은 임금교섭 시스템과 통화체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임금교섭의 집중화 정도와 중앙은행 독립성 정도가 임금평등과 실업률 및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제도와 관련하여 Hall & Soskice(2001)는 고용보호지수와 실업보호지수, 임금교섭 패턴 등이 서로 다른 발전모델에서 뚜렷한 차이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이러한 노동시장제도와 다른 제도들간의 보완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Hall & Soskice(2001)에 실려 있는 Franzese(2001)는 통화정책과 임금교섭 패턴 간의 관계를 밝히고 그것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같은 책에 실려 있는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는 고용보호와 실업보호를 포함하는 사회보호와 숙련형성 간의 보완성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제도적 보완성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제도를 분석하고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들이라 하겠다.

Amable(2003)은 Hall & Soskice의 ‘자본주의 다양성론’을 조절이론적 시각에서 발전시켜 자본주의의 발전모델을 제품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스템, 복지시스템, 교육시스템 등 다섯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보다 정치하게 분석하여, 앵글로색슨형, 대륙유럽형, 사회민주주의형, 지중해형, 아시아 자본주의 등 5가지 자본주의 모델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복지국가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주의 모델을 유형화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자본주의 모델에서의 노동시장제도의 차이, 즉 고용보호와 사회보호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러한 노동시장제도와 상호보완적인 다른 제도들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발전모델 및 노동시장제도(고용보호, 실업보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Boeri(2002)와 Sapir(2005)는 유럽연합(EU)의 발전모델을 앵글로 색슨형, 대륙형, 노

3) 사실 Hall & Soskice(2001)의 저서 부제가 ‘비교우위의 제도적 기초’이다.

르딕형, 지중해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발전모델의 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고용보호와 실업보호와 같은 노동시장제도 지표들과 고용률과 빈곤율이라는 성과지표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분석 결과는 앵글로 색슨 모델보다는 노르딕 모델의 성과가 우월함을 밝히고 있다. Huo-Nelson-Stephens(2008)는 OECD 국가들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기독교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용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높고 실업급여 (단기)소득대체율이 높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용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발전모델, 노동시장제도,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밝히는 분석 작업들을 해왔다. 그 연구들에서 노동시장제도 관련 지표로서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는 고용보호, 실업보호,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이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 지표는 대부분 고용률과 실업률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방법을 참고하면서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소득불평등도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적 성과 지표를 선택하고, 노동시장제도들이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방법과 함께, 노동시장이 유연하지만 불안정한 앵글로 색슨(Anglo-Saxons) 모델의 영국, 노동시장이 안전하지만 경직적인 대륙유럽(Continental Europe) 모델의 독일, 노동시장이 유연하고도 안전한 노르딕(Nordics) 모델의 덴마크 3국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시장 안전성,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노동시장제도 특성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란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분석

1. 노동시장제도 지표

위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우리의 연구는 먼저 노동시장제도들을 몇 가지 지표를 통해 파악하고, 이 제도들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OECD 주요국의 자료와 영국·독일·덴마크 3국의 노동시장제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제도들과 그 제도들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설정한다. 먼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제도들로는 단체교섭제도(단체교섭 수준, 단체교섭 적용범위), 고용보호제도(해고제한제도, 장기근속 관행), 실업보호제도(실업보험제도, 실업부조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제도,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설정한다. 즉 ① 단체교섭 수준, ② 고용보호 수준, ③ 실업보호 수준, ④ 노동시장정책 수준 ⑤ 탈상품화 수준 등.

단체교섭 수준은 단체교섭의 집중화 정도로 표시한다. 기업별 교섭, 산업별 교섭, 중앙교섭 등 단체교섭 수준의 차이를 지수화한다. 실증분석에서는 보통 임금교섭의 집중화 정도가 사용되는데 우리의 연구에서도 임금교섭 집중화 지수를 사용한다.

고용보호 수준은 고용보호의 엄격성, 즉 해고의 자유제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보통 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Index)를 통해 측정된다. 고용보호 지수는 OECD의 고용보호법 지수(EPL Index)와 세계은행의 고용경직성 지수(Rigidity of Employment Index) 등이 주로 사용된다. 전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개인적 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집단해고 요건, 임시직 고용에 대한 규제 등 세 영역의 항목들을 점수화하여 계산한 것이다. 지수는 0에서 6까지의 값으로 표

시되는데 지수 값이 클수록 고용보호가 엄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후자는 채용의 어려움, 해고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경직성 등을 0에서 100까지 점수화하여 종합한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 경직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우리 연구에서는 OECD의 고용보호법 지수와 함께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에서 계산된 고용보호지수와 Lawson & Bierhanzl(2004)이 작성한 노동시장 유연성지수도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 고용보호법을 통한 채용 및 해고의 제한 정도만이 아니라 기업수준의 고용보호 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계산한 고용보호지수는 OECD가 작성한 EPL 지수와 집단해고보호 지수⁴⁾에다, 기업수준의 사적 고용보호지수⁴⁾를 계산한 것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진다. 1에 가까워질수록 고용보호지수가 높음을 나타낸다. 후자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을 노동시장의 자유도로 보고 폭넓게 정의하여 그 지수를 작성하였다. 후자는 노동시장 유연성지수(Labor Market Flexibility Index)를 채용 및 해고 관행, 실업급여 수준, 최저임금제도 수준, 단체교섭 수준, 최상위 한계세율 수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표들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이 지수는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가지며 10에 가까워질수록 노동시장이 더 유연하다.

실업보호 수준은 실업에 대한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업보호지수(Unemployment Protection Index)로 측정된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먼저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의 계산 방식에 따라 실업급여 소득대체율(Unemployment Replacement Rate)과 실업급여의 관대함(GDP에서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급여 지급 요건 등을 종합한 지수를 사용한다. 이 실업보호지수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실업보호 수준이 높다. 실업보호지수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 실업급여 소득대체율로는 최초 순소득대체율, 6개월 순 소득대체율, 5년 조소득대체율 등이 사용된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실업보호지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노동시장정책 수준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는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한다. 여기

4) 예컨대, 기업인력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 대표기구의 존재 여부, 기업 내 고용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외부의 강한 노조의 존재 여부 등을 지수화한 것이다(Estevez-Abe, Iversen, Soskice 2001, p.166).

서 특히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한 정부지출의 비율, 즉 ALMP 지표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노동시장제도 지표라 할 수 있다. ALMP 지표는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와 함께 주요한 노동시장제도 지표로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데, 우리의 연구에서도 이 지표를 사용한다.

탈상품화 수준은 고용보호와 실업보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생활이 보장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탈상품화란 “개인 혹은 가족이 시장에 참여하든 않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Esping-Anderson 1990)를 말한다. 이러한 Esping-Anderson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에 따라 탈상품화 수준을 연금, 질병수당, 실업보험 수준의 점수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Huo-Nelson-Stephens(2008)의 탈상품화 지수(Decommodification Index)⁵⁾를 통해 측정한다. 여기서 물론 탈상품화 지수가 클수록 탈상품화 수준이 높는데, 이는 그만큼 복지국가가 더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우리의 연구에서는 ① 고용률 ② 실업률 ③ 빈곤율⁶⁾ ④ Gini 계수를 사용한다. 이 지표들은 노동시장 성과와 소득 분배 성과를 나타내는 경제적 성과 지표들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 지표가 앞에서 제시한 노동시장제도 지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과제이다.

2. 발전모델과 노동시장제도 지표

앞에서 제시한 노동시장제도 지표가 서로 다른 발전모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영국, 독일, 덴마크 등 3국 사이에 노동시장제도의 지표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5) 연금의 경우 최저 급여수준, 표준 급여수준, 기여금 납부 기간, 연금 재원에서의 개인 부담 몫 등의 탈상품화 수준을 1, 2, 3으로 점수화하여 계산한 것이며, 실업보험과 질병보험의 경우 급여수준, 수급에 필요한 고용기간, 급여지급 기간 등의 탈상품화 수준을 1, 2, 3으로 점수화하여 계산한 것이다. 탈상품화 지수는 이들 점수들을 합계한 것이다.

6) 여기서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얻는 개인의 비중을 말한다.

Amable(2001), Esping-Anderson(1990), Sapir(2005) 등의 분류 방법⁷⁾을 참고하여 영국, 독일, 덴마크 3국이 각각 속한 앵글로 색슨형(신자유주의형), 대륙유럽형(코포라티즘형), 노르딕형(사회민주주의형) 등 3개의 발전모델⁸⁾로 나누어 노동시장제도 지표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표 1>에서 보면 고용보호지수와 실업보호지수는 대륙유럽 모델과 노르딕 모델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반면 앵글로 색슨 모델은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Lawson & Bierhanzl(2004)의 방법으로 계산한 채용 및 해고 관행 기준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앵글로 색슨 모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르딕 모델이고 대륙유럽 모델이 가장 낮다. 이러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륙유럽형에서 고용보호와 실업보호가 강하고 따라서 노동시장이 가장 안전하며(혹은 경직적이며), 앵글로 색슨형에서 고용보호와 실업보호가 약하고 따라서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하다. 노르딕형은 고용보호와 실업보호가 대륙유럽형보다는 약간 약하며 따라서 노동시장은 대륙유럽형에 비해 좀 더 유연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서로 다른 발전모델에 속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3국의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노동시장 유연성지수를 <표 2>를 통해 보면, 세 국가간에 노동시장제도 지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은 고용보호지수와 실업보호지수 둘 다 가장 낮아 노동시장 유연성지수가 가장 높다. 독일은 고용보호지수가 가장 높고 실업보호지수도 높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지수가 가장 낮다. 그런데 덴마크는 고용보호지수는 낮은 편이지만 실업보호지수는 가장 높으며⁹⁾, 채용 및 해고 기준 노동시장 유연성지수는 오히려

7) Amable(2001)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요인 분석에 기초하여 앵글로 색슨형, 대륙유럽형, 사회민주주의형, 지중해형, 아시아 자본주의형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Esping-Anderson은 복지 체제를 기준으로 자유주의형, 보수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Sapir(2005)는 체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기준으로 앵글로 색슨형, 대륙형, 노르딕형, 지중해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포함되는 나라들을 보았을 때, Amable과 Sapir의 앵글로 색슨형은 Esping-Anderson의 자유주의형에 해당한다. Amable의 대륙유럽형과 Sapir의 대륙형은 Esping-Anderson의 보수주의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Amable과 Esping-Anderson의 사회민주주의형은 Sapir의 노르딕형에 해당한다.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 Amable과 Esping-Anderson은 대륙유럽형(혹은 보수주의형)으로 분류하였지만, Sapir는 노르딕형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Amable과 Esping-Anderson에 따라 네덜란드를 대륙유럽형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코포라티즘 국가에 가깝기 때문이다.

8) 이 세 발전모델의 차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형기(2007)를 참조.

영국보다도 높다⁹⁾. 여기서 우리는 덴마크의 노동시장이 영국 및 독일과 달리 매우 유연하면서도 안전한 특수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고용보호지수와 실업 보호지수,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지수를 통해 보았을 때, 영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하지만 불안전하고 독일 노동시장은 안전하지만 경직적인 데 반해, 덴마크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¹¹⁾.

〈표 1〉 발전모델별 고용보호·실업보호·노동시장 유연성 지수

발전모델	고용보호지수		노동시장 유연성지수	실업보호지수
	A	B	C	A
앵글로 색슨 모델	0.27	1.17	4.45	0.23
대륙유럽 모델	0.71	2.34	2.86	0.70
노르딕 모델	0.69	2.23	3.50	0.65

자료: A: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 1990년대 말 자료.

B: OECD의 EPL 지수(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003년 자료.

C: Lawson & Bierhanzl(2004): 2000년 자료, 채용 및 해고 관행 기준.

〈표 2〉 영국, 독일, 덴마크의 고용보호·실업보호·노동시장 유연성 지수

	고용보호 지수		노동시장 유연성지수	실업보호지수
	A	B	C	A
영국	0.25	1.1	4.9	0.11
독일	0.86	2.5	1.8	0.77
덴마크	0.53	1.8	6.5	0.91

자료: A: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 1990년대 말 자료

B: OECD의 EPL 지수(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003년 자료

C: Lawson & Bierhanzl(2004): 2000년 자료, 채용 및 해고 기준.

9) Estevez-Abe, Iversen, Soskice(2001)의 계산에 의하면 덴마크는 OECD 국가들 중 실업 보호지수가 가장 높다.

10) 채용 및 해고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덴마크(6.5)는 미국(6.7) 다음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인해고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연하지만, 집단해고일 경우에는 영국은 물론이고 독일보다도 더 경직적이다. OECD가 작성한 집단해고 기준 고용 보호법(EPL)지수는 2003년에 덴마크는 3.9, 영국은 2.9, 독일은 3.8이다.

11) 2002년 EUROSTART 자료에 의하면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독일이 10.6년인데 영국은 8.2년이고 덴마크는 영국과 거의 같은 8.3년이다. 이와 같이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실업보호지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 덴마크의 노동시장이 안전하다.

덴마크가 노동시장이 유연하면서도 안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잘 알려진 대로 관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강도 높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보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황금 삼각형’이라 불리는 덴마크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Madson 2008)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에서 유연성은 낮은 고용보호를 통해, 안전성은 강한 실업보호와 높은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을 통해 각각 실현되고 있다.

한편, <표 3>에는 노동시장 안전성 지표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 안전성 지표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실업급여 지급기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등 세 지표를 통해 파악하였다¹²⁾. 표에서 보면, 2004년에 덴마크는 3국 중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가장 길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도 가장 높다. 덴마크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7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덴마크가 48개월로서 다른 두 나라에 비해 훨씬 길다. GDP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도 덴마크가 1.86%로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수준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실업률 1%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GDP에 대한 %)은 0.34%로서 독일과 영국의 3배 수준에 달할 만큼 높다.

<표 3> 노동시장 안전성 지표 : 2004년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실업급여 지급기간 (개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노동시장정책 총지출에 대한 %
	최초 순소득 대체율	60개월 이상 실업시 평균 순소득대체율		GDP에 대한 %	실업률 1%당 GDP에 대한 %	
영국	54	53	6	0.54	0.11	74.0
독일	69	66	12	1.15	0.12	33.1
덴마크	70	70	48	1.86	0.34	41.1

자료: OECD, *World Employment Outlook*, 2006.

12) 우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표로 고용보호지수를, 안전성 지표로 실업보호지수(혹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과 지급기간)와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유연안전성 개념에 따라 유연성과 안전성을 구분할 때 고용보호지수는 안전성보다 유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표 4〉 영국·독일·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지출 비율 추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1991-1995	1996-2000	2001-2005
영국	GDP에 대한 %	0.54	0.37	0.50
	실업률 1%당 GDP에 대한 %	0.06	0.06	0.10
독일	GDP에 대한 %	1.48	1.30	1.17
	실업률 1%당 GDP에 대한 %	0.23	0.16	0.14
덴마크	GDP에 대한 %	1.77	1.70	1.88
	실업률 1%당 GDP에 대한 %	0.22	0.33	0.37

자료 : OECD, *World Employment Outlook*, 2006.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의 1990년대 이후의 추이를 <표 4>에서 보면 영국, 독일, 덴마크 세 나라의 지출 비율 격차가 계속 유지되어 왔고 3국간에 정책 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독일과 덴마크의 실업률 1%당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을 비교해 보면, 1990년대 전반에는 차이가 없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큰 차이가 나며 더욱이 독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독일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1990년대 초 이후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영국의 경우 그 비율이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대 전반에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국의 토니 블레이어 정부에서 사회투자를 강화한 뉴딜(New Deal)정책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안전성 지표는 곧 탈상품화 지수와 연계된다. <표 5>에서 보면 덴마크의 탈상품화 지수가 3국 중 가장 높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높은 안전성과 높은 탈상품화 수준에 따른 노동자 생활의 안정이 덴마크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유연안전성 모델을 안정적이면서도 활력 있는 ‘대안적 노동시장 모델’로 성립하게 하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노동시장 모델로서의 유연안전성 모델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하의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신자유주의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넘어서는 노동시장 모델의 ‘제3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영국, 독일, 덴마크 3국의 노동시장제도의 차이를 요약하자면, 영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독일은 노동시장 안전성, 덴마크는 노동시장 유연

〈표 5〉 탈상품화 지수

	연금	질병수당	실업보험	종합지수
영국	10.4	8.1	7.8	22.8
독일	10.9	14.0	10.0	30.3
덴마크	13.6	11.8	12.6	33.3

자료: Huo, Nelson, Stephens(2008), p.7, Table 3.

안전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영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하지만 불안하며, 독일의 노동시장은 안전하지만 경직적이며,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지만 안전하다. 독일의 노동시장 안전성은 강한 고용보호, 즉 해고 제한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기능한다. 반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에서의 안전성은 노동시장이 유연한 상태에서 실업보호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보장되므로 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직성이 아니라 유연성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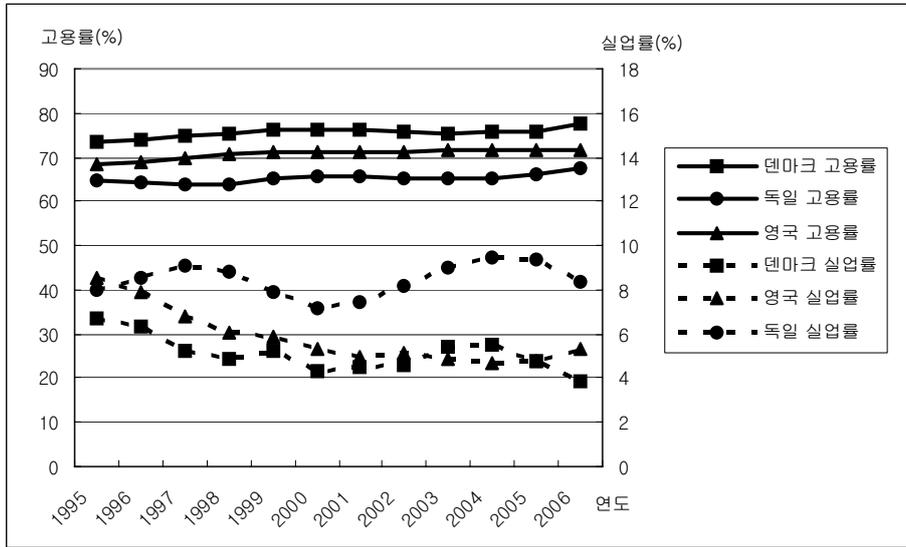
3.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위에서 검토한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는 어떠한가? 우선 영국, 독일, 덴마크 3국의 경제적 성과를 고용률과 실업률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자.

고용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1995년과 2006년 사이에 일관되게 덴마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영국이며 독일이 가장 낮다. 최근 10여 년간 3국간의 고용률 순위가 계속 ‘덴마크 > 영국 > 독일’ 순이었고 고용률 격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독일의 경우 그동안 변화가 거의 없던 고용률이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노동시장 규제 완화와 같은 경제개혁의 효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률은 독일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국 순이고 덴마크가 가장 낮다. 실업률 추이를 보면 덴마크와 영국은 1995년 이래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독일은 경기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7~9%대의 높은 실업률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여기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으로 특징지워지는 덴마크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독일의 고용률이 가장 낮으며 노동시장이 유연한 영국의 고용률이 그 중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연성, 안전성,

(그림 1) 영국·독일·덴마크 3국의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 EUROSTAT.

그리고 유연안전성이란 서로 다른 노동시장제도의 특성과 고용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이란 경제적 성과는 유연안전성이란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의 효과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의 낮은 고용률의 원인에 관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주장과 서비스 부문의 취약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전자의 주장은 해고 제한이 엄격한 고용보호법 때문에 고용주들이 해고가 쉽지 않아 고용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인데, 노동시장이 유연한 앵글로 색슨 모델 국가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주장은 독일에서 고용률이 낮은 이유가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기 때문인데¹³⁾, 그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부문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anow & Seils 2000). 이 주장은 독일 산업별 노조의 강력한 교섭력에 기초한 고임금 현

13) 2005년 현재 민간부문 고용에서 서비스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이 76.4%, 덴마크가 72.8%, 독일 67.6%이다.

상과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 확대를 반대하는 노조의 연대주의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 확대를 저해하였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런 주장은 자유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미국의 고용 확대가 주로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가능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영국, 독일, 덴마크 3국의 노동시장제도 지표의 차이와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로부터 우리는 3국의 노동시장제도의 차이가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 이제 이들 3국을 포함하는 OECD 국가 자료에 기초하여 고용보호, 실업보호, 노동시장정책, 단체교섭 수준과 같은 노동시장제도가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Gini 계수 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로 하자.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3국의 서로 노동시장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 연구 중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제도를 시계열 분석한 Huo-Nelson-Stephens(2008)에 의하면, 실업급여 소득대체율(6개월, 순대체율)이 높을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으며, 반면 고용보호법이 엄격할수록 고용률이 낮다. 즉 단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높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율이 높은 노르딕 국가(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고용률이 높은 반면, 장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보장지급 급여세(payroll tax)가 징수되며, 고용보호법이 엄격한 대륙유럽국가(기독교 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 대체로 고용률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저자들은 높은 단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친화적 정책이며, 높은 장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과 고용보호법, 그리고 지급 급여세 방식의 복지재원 조달은 고용저해적 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용률이란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노동시장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 노동시장제도가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1990년대 말경의 OECD 국가 자료로 분석한 Amable(2003)에 의하면, 시장기반 모델로부터 거리가 먼 경제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노동시장 규제가 많을수록 실업률이 높으며, 노사관계가 조정될수록 실업률이 낮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조정되는 경우 노동시장

이 규제되더라도 실업률은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사관계가 조정되고 복지국가 수준이 높으며 공공 교육 지출이 많을수록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규제가 약한 자유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앵글로 색슨 모델에서 실업률이 낮지만, 노사관계가 조정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며 복지국가 수준이 높은 조정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노르딕 모델에서도 실업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시장제도와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검토하자. 먼저 빈곤율을 보면 2000년 현재 영국이 11.4, 독일이 9.8, 덴마크가 4.3이다. Gini 계수는 영국이 0.360, 독일이 0.283, 덴마크가 0.247이다. 임금 불평등도를 나타내주는 임금분산(9분위 임금/1분위 임금)은 영국 4.2, 독일 3.6, 덴마크 2.5이다. 임금분산은 임금교섭의 집중화와 반비례하는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임금교섭이 집중화할수록 임금분산은 작아지고 따라서 임금불평등이 작아진다. 단체교섭(임금교섭) 수준이 덴마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독일, 영국 순이다¹⁴⁾. 그리고 노조조직률은 2000년 현재 영국 35%, 독일 25%, 덴마크 74%이다. 여기서 3국 중 노조조직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임금교섭이 보다 집중화되어 있는 덴마크의 임금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반면, 노조 조직률이 가장 낮고 임금교섭이 기업 수준으로 분권화되어 있는 영국의 임금불평등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지표와 기존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빈곤율과 Gini계수가 각 나라의 노동시장제도와 그것을 포함한 발전모델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위에서 논의한 노동시장제도 지표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OECD 18개국¹⁵⁾의 2000년경의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보기로 하자.

회귀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로,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Gini 계수 등 4 가지를 설정하고, 독립변수로서는 경제성장률,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적극적 노

14) 단체교섭 수준은 기업수준 교섭=1, 산업수준 교섭=2, 제재 없는 중앙교섭=3, 제재 있는 중앙교섭=4로 점수화했을 때, 1985~1992년간에 영국 1.0, 독일 2.0, 덴마크 2.8로 나타났다(Hall and Soskice 2001).

15) 18개국은 다음과 같다. Sweden, Germany, Austria, Italy, Netherlands, Japan, Norway, Finland, France, Belgium, Denmark, Switzerland, Ireland, Canada, New Zealand, Australia, U.K., U.S.

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발전모델 더미를 설정하였다¹⁶⁾. 발전모델은 앵글로 색슨 모델, 대륙유럽 모델, 노르딕 모델 등 셋으로 구분한다.

먼저 고용률과 실업률의 단순 회귀분석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이 회귀식에서는 독립변수로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지출 비율, 그리고 발전모델 더미를 설정하였다. 먼저 고용률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실업보호지수가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Huo-Nelson-Stephens(2008)의 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이 분석 결과는 높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과 같은 실업보호가 강하게 이루어질 경우 노동자들이 숙련형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만들어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용보호지수는 고용률과 마이너스 관계에 있지만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회귀식을 보면, 실업보호지수가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다. 또한 노동시장 규제가 많은 대륙유럽 모델에서 실업률이 높는데, 이는 앞에서 본 Amable(2003)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발전모델이 실업률을 설명하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요인임을 말해준다¹⁷⁾.

그런데 이 회귀식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율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마도 이 회귀식에서 사용된 각종 변수의 자료가 2000년의 한 해 값이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뒤에서 변수를 달리하고 몇 개 연도 풀링한 자료를 사용한 다른 회귀식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제 빈곤율과 Gini 계수 회귀분석 결과를 보자. 빈곤율과 Gini 계수 회귀식에서는 경제성장률,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단체교섭 지수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빈곤율 회귀식을 <표 7>에서 보면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실업보호지수가 높을수록, 단체교섭 수준이

16) 고용보호지수와 실업보호지수 작성의 토대가 된 원자료는 대체로 1990년대 말 자료이며,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등의 자료는 2000년 자료이다.

17) 고용률과 실업률 회귀식에서 발전모델 더미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중공선성을 체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높을수록 빈곤율이 낮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빈곤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교섭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빈곤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기업별 교섭보다 산업별 교섭을 하는 나라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하여 노동빈민을 줄이고 따라서 빈곤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Gini 계수 회귀식을 보면, 고용보호지수가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낮게 나타난다. 이는 고용보호가 강한 나라는 그만큼 노동시장 양극화가 적게 진전되고 그 결과 소득불평등이 작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율 회귀식과 Gini 계수 회귀식을 비교해 보면, 고용보호제도가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기여하지 않지만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6〉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I : 고용률 및 실업률의 회귀분석 : 2000년경

	고용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0.709 (0.784)	-0.026 (0.345)
고용보호지수	-1.109 (9.663)	-0.076 (4.251)
실업보호지수	20.337 (9.711) +	-13.058 (4.272) *
ALMP지출비율	-5.948 (3.588)	2.085 (1.578)
자본주의모델 1	-0.877 (6.304)	4.657 (2.773)
자본주의모델 2	-10.278 (7.063)	6.349 (3.107) +
상수항	72.110 (4.464) **	7.522 (1.964) **
Adj R ² /관측치 수	0.281/16	0.197/16

- 주: 1) ** 는 99%, *는 95%, +는 90%에서 각각 유의함.
- 2) ()안은 표준오차임.
- 3) 더미변수인 자본주의 모델 1은 노르딕 모델, 자본주의 모델 2는 대륙유럽 모델.

〈표 7〉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II : 빈곤율 및 Gini계수의 회귀분석 : 2000년경

	빈곤율	Gini 계수
경제성장률	-1.887 (0.657) *	-0.011 (0.013)
고용보호지수	3.730 (2.602)	-0.095 (0.051) +
실업보호지수	-6.849 (2.582) *	-0.006 (0.051)
ALMP지출 비율	-1.285 (1.458)	-0.005 (0.029)
단체교섭지수	-2.450 (0.775) *	-0.028 (0.015) +
상수항	24.144 (3.162) **	0.464 (0.062) **
Adj R ² /관측치 수	0.787/14	0.552/14

- 주: 1) ** 는 99%, *는 95%, +는 90%에서 각각 유의함.
- 2) ()안은 표준오차임.

이제 독립변수를 달리하고 2000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한 회귀식 모형을 통해 노동시장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대상 국가는 OECD 23개 국가이다¹⁸⁾. 회귀식에서 종속변수는 2003~2005년 3개 년도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풀링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노동시장의 제도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ALMP), 고용보호지수(EPL), 실업급여 소득대체율(URR) 등 세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세 변수의 2002~2004년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률과 실업률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각 제도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률 회귀분석에서는 전기(t-1기)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실업률 회귀분석에서는 전기의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각각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8>과 <표 9>에 나타나 있다. 먼저 <표 8>의 고용률 회귀분석을 보면, 풀링한 단순 회귀(Pooled OLS) 모형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및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고용률에 정(+)의 효과를 갖는 반면, 고용보호지수는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고

<표 8>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III : 고용률 회귀분석 : 2003~2005년

	풀링한 단순회귀 모형 (Pooled OLS)		임의효과 모형 (Random Effect)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ALMP	2.10	1.27 +	0.85	1.10	-1.42	1.58
EPL	-2.39	0.60 **	-0.89	0.60	-0.59	0.94
URR	0.12	0.05 *	0.03	0.04	-0.09	0.07
Growth	0.28	0.38	-0.22	0.09 **	0.02	0.10
lag unemp	-1.19	0.14 **	-0.71	0.14 **	-0.40	0.22 +
year2004	0.63	1.10	0.44	0.16 **		
year2005	0.95	1.16	1.24	0.19 **		
const.	71.04	3.38 **	71.58	3.00 **	76.79	4.74 **
R ² (Rho)		0.63	0.64	(0.98)	0.16	

주 : + 90% 유의수준, * 95% 유의수준, ** 99% 유의수준.

18)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Japan, Kore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pain, Sweden, U.K., U.S.

용률이 높고, 반대로 고용보호 정도가 강할수록 고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임의효과(Random Effects) 모형과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에서는 이 세 제도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표 9>에서 실업률 회귀분석을 보면, 풀링한 단순회귀(Pooled OLS) 모형에서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이나 고용보호지수 등 다른 제도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단순회귀 모형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고용보호지수가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과 고용보호지수 모두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은 확실히 실업률을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호지수는 풀링한 단순회귀 모형에서는 고용률을 낮추지만,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실업률을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풀링한 단순회귀 모형에서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용보호가 한편에서는 고용률을 낮출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률을

<표 9>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 IV : 실업률 모형 : 2003~2005년

	풀링한 단순회귀 모형 (Pooled OLS)		임의효과 모형 (Random Effect)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ALMP	0.67	0.76	-0.89	0.76	-1.50	0.90 +
EPL	-0.57	0.39	-0.69	0.42 +	-0.92	0.54 +
URR	0.07	0.03 *	0.06	0.03 *	0.06	0.04
Growth	0.13	0.22	-0.02	0.07	-0.05	0.06
lag emp	-0.44	0.05 **	-0.42	0.07 **	-0.44	0.10 **
year 2004	-0.01	0.65	-0.05	0.12		
year 2004	-0.17	0.68	-0.09	0.15		
const.	32.93	3.58 **	33.69	4.65 **	36.18	7.35 **
Rho(Rho)		0.55	0.56	(0.97)	0.52	

주 : + 90% 유의수준, * 95% 유의수준, ** 99% 유의수준.

낮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실업률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점,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고용률과 실업률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시사해 준다.¹⁹⁾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Gini 계수 등 네 가지 경제적 성과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가 실업률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 고용보호의 강화는 고용률을 낮추지만 실업률도 낮춘다는 점, 실업보호의 강화는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실업보호의 강화와 단체교섭의 집중화는 빈곤율을 줄일 있다는 점, 고용보호의 강화와 단체교섭(임금교섭)의 집중화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호의 강화는 고용률을 낮추는 부정적 효과를 낳지만, 실업률을 줄이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제 유연안전성 모델의 상대적인 경제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보호 수준과 실업보호 수준을 조합하여 노동시장제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경제적 성과를 고찰하기로 하자. OECD 18개 국가들의 노동시장제도를 유형 I(높은 고용보호+ 높은 실업보호), 유형 II(높은 고용보호+ 낮은 실업보호), 유형 III(낮은 고용보호+ 높은 실업보호), 유형 IV(낮은 고용보호+ 낮은 실업보호) 등 네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제적 성과 지표인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등을 본 것이 <표 10>이다. 표에서 보면, 낮은 고용보호 수준과 높은 실업보호 수준이 결합된 유형 III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고 실업률과 빈곤율이 가장 낮아서 경제적 성과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고용보호 수준은 높고 실업보호수준이 낮은 유형 II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고 실업률과 빈곤율이 높아 경제적 성과가 가장 나쁘다. 고용보호 수준과 실업보호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 IV에서는 고용률이 두 번째로 높고 실업률은 두 번째로 낮지만 빈곤율이 가장 높다. 고용보호와 실업보호가 모두 높은 유형 I은 고용보호가 낮고 실업보호가 높은 유형 III보다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세 성과지표 모두에서 성과가 나쁘다.

고용보호 수준이 낮은 대신 실업보호 수준이 높은 노동시장제도 유형 III은

19) Huo-Nelson-Stephens(2008)에서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의 경우 6개월 순소득대체율은 고용률을 높이고 5년 조소득대체율은 고용률을 낮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초 순소득대체율을 사용한 우리의 분석 결과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고용률을 높일 수 있고 실업률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유연안전성 모델이다. 덴마크는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고용보호 수준과 실업보호 수준이 모두 낮은 노동시장제도 유형 IV는 곧 유연성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고용보호 수준과 실업보호 수준이 모두 높은 노동시장제도 유형 I는 경직성 모델이다. 이 유형의 대표적 국가는 독일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노동시장 모델은 경제적 성과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10〉 고용보호와 실업보호 수준별 경제적 성과 : 2000년

노동시장제도 유형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I. 높은 고용보호 + 높은 실업보호	68.8	5.9	7.3
II. 높은 고용보호 + 낮은 실업보호	63.3	8.5	11.5
III. 낮은 고용보호 + 높은 실업보호	77.4	3.6	5.5
IV. 낮은 고용보호 + 낮은 실업보호	70.3	5.5	12.6

주: 1) 유형 I(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유형 II(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유형 III(덴마크, 스위스), 유형 IV(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영국).

2) 고용보호지수와 실업보호지수가 평균보다 높으나 낮으냐의 기준으로 분류.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IV. 맺음말

본론에서 우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특징지워지는 영국, 노동시장의 안전성으로 특징지워지는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으로 특징지워지는 덴마크 3국의 노동시장제도의 차이를 고용보호지수, 실업보호지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 등 노동시장제도 지표를 중심으로 밝히고, 그런 노동시장제도들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우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즉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을 높여야 한다. 실업보호를 강화하면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실업보호의 강화가 초래할 실업률 증대 효과를 감소시키려면 반드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대륙유럽 모델과 같이 고용보호가 엄격하여 노동 시장이 경직적인 나라는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다. 고용보호가 강하고 장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노르딕 모델 그 중에서도 특히 덴마크와 같이 고용보호가 약하고 실업보호가 강하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강도 높게 실시하는 나라가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이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에서 실업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아울러 기업별 임금교섭보다는 산업별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호제도와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실업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도 높게 실시하는 ‘3결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의 추구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런 유연안전성 모델을 정착시킨 대표적 국가가 바로 덴마크이다. 우리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덴마크는 고용보호, 실업보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에서 영국 및 독일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3국 중 가장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보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이른바 황금 삼각형으로 구성된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이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조건들로서 다음 몇 가지를 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진적 평생교육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 둘째, 산업수준의 임금교섭에서의 합의에 의한 임금절제(wage moderation)가 이루어지고 산업수준에서 조정된 노사관계가 임금부상(wage drift)을 막아준다는 점, 셋째, 실업급여 재원이 지급급여세(payroll tax)가 아니라 정부의 일반회계라는 점 등. 이러한 요인들이 유연안전성 실현을 뒷받침하는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이다. 여기서 특히 셋째 요인과 관련해 독일은 복지재원을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사회보험 기여금 혹은 지급급여세(payroll tax)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는 복지재정의 위기를 초

래할 가능성이 있는 데 반해,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덴마크는 그러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Benner & Vad 2000).

그런데 덴마크의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은 덴마크의 노동 및 복지정책의 전환 이후 실현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덴마크는 1970~80년대의 ‘노동 없는 복지’ 정책으로부터 1990년대의 ‘복지를 위한 노동(work-for-welfare)’ 정책으로 이행하였으며 1994년부터 대규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유연안전성 실현을 가능하게 하였다(Benner & Vad 2000). 높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 양대 정책이 유연안전성 모델을 실현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아울러 Madson의 지적처럼 “덴마크 노동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은 직업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제도, 선진적인 보육제도, 공적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 등 복지국가 서비스를 통해 보다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Madson 2008). 이 점은 고용률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에게 매우 유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즉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실현을 위해서는 한편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교육훈련제도와 복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1997년부터 집권한 신노동당(New Labor)의 제3의 길에 기초한 사회투자의 확대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된다. 전형적인 앵글로 색슨형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었던 대처리즘(Thatcherism)이 초래한 사회 양극화와 빈곤 심화, 노조 약화를 치유하기 위해 실시된 뉴딜이 실업률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고용률도 완만하게나마 증가시키며 빈곤율을 줄이며 노동권을 강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대처리즘이 형성시킨 경제구조의 경로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추진된 뉴딜은 자유시장경제의 길을 걷어온 앵글로 색슨형 발전모델이 사회민주주의적 제도의 도입에 의해 제한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Rhodes 2000). 그러나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서 빈곤율을 낮추는 실업보호정책 등 사회경제정책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독일은 낮은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실업률을 낮추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 Merkel 연합정부는 조정시장경제인 독일경제에 자유시장경제적 요소를 결합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으로 독일은 영미와 같은 앵글로 색슨형 발전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시 코포라티즘인 일본형에 가까워지고 있다(Boyer 2005). Boyer가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독일의 노동시장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사공동결정제도는 종래에는 기업에서 권력분점 기능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성 동맹의 기능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고용률이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노동시장제도 모색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영국과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모델로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덴마크를 벤치마킹하려고 있다. 영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에서 안전성 측면에, 독일은 그 유연성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복지체제에 의해 보장되는 안전성과 결합될 경우 경제적 성과가 높아지고 공평성과 동태적 효율성 간에 명백한 보완성이 나타남을 보여준다(Boyer 2006).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실현에는 물론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Wilthagen & Tros(2004)의 주장처럼 나라마다 서로 다른 ‘유연성-안전성 연계(flexibility-security nexus)’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의 기존의 발전모델에 유연안전성의 요소가 결합되면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이 창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란 양대 문제를 극복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 한국경제(김형기 2006)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의 실현은 핵심적 의제라 생각된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구축의 방향은 곧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상호보완적인 제도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특히 실업보호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동시 강화가 이러한 제도 설계에서 중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참고문헌

- 김형기. 『한국경제 제3의 길』. 한울아카데미, 2006.
- _____. 「글로벌화·정보화 시대와 자본주의의 다양성」. 김형기 엮음, 『현대 자본주의 분석』. 한울아카데미, 2007.
- Madsen, P. 「텐마크식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개혁의 새로운 모델인가?」. 『국제노동브리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08, pp.3~12.
- Amable, B.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Benner, M., and T. B. Vad. “Sweden and Denmark: Defending the Welfare State.” In *Welfare and Work in the Open Economy*. Scharpf, F. and V. Schmidt (eds.), Volume II. Diverse Responses to Common Challenges, pp.339~466.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Boeri, T. “Let Social Policy Models Compete and Europe will Win.”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hosted by the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2002.
- Bowles, S., and R. Boyer.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Decentralisation as Barriers to High Employment? Notes on Employer Collusion, Centralised Wage Bargaining, and Aggregate Employment.” In *Labour Rela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Brunetta R. and C. Dell'aringa (eds.), pp.325~352. N.Y : New York University, 1990.
- Boyer, R. “What Future for Codetermin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in Germany?” Paris-Jourdan Sciences Economiques, Working Paper, No. 2005-39, 2005.
- _____. “Employment and Decent Work in the Era of Flexicurity.”

- Paris-Jourdan Sciences Economiques, Working Paper No.2006-21, 2006.
- Brunetta R., and C. Dell'aringa (eds.). *Labour Rela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Macmillan, 1990.
- Dosi, G. *Innovation, Organization and Economic Dynamics: Selected Essays*. Cambridge: Edward Elgar, 2000.
- Esping-Anderson, G.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New Jersey,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Franzese, R. "Institutional and Sectoral Interactions in Monetary Policy and Wage/Price-Bargaining." In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Hall, P. and D. Soskice (e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Hall, P., and 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Huo, J., Nelson, M., and J. Stephens. "Decommodification and Activation in Social Democratic Policy: Revolving the Paradox."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8 (1) (2008): 5~20.
- Iversen, T. *Contested Economic Institutions: The Politics of Macroeconomics and Wage Bargaining in Advanced Democrac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Lawson, R. A., and E. Bierhanzl. "Labor Market Flexibility: An Index Approach to Cross-Country Comparisons." *Journal of Labor Research*. Vol XXI, No. 1 (2004): 117~126.
- Lordon, F. "Periodic and Aperiodic Fluctuations in a Goodwinian/Kaldorian Model of Endogenous Growth." mimeo, CEPREMAP, 1994.
- Madsen, P.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Social Security and Labor Market Policy, Country Report: Denmark." AIAS Working Paper 2007-51, Amsterdam Institute for Advanced Labour Studies, University

of Amsterdam, 2007.

Manow, P., and E. Seils. "Adjusting Badly: The German Welfare State, Structural Change, and the Open Economy." In *Welfare and Work in the Open Economy*. Scharpf, F. and V. Schmidt (eds.), pp.285~307. Volume II. Diverse Responses to Common Challeng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Nickel, S. "Unemployment and Labour Market Rigidities: Europe versus North Ame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 (3) (1997): 55~74.

Paloheimo H. "Between Liberalism and Corporatism: The Effect of Trade Unions and Governments on Economic Performance in Eighteen OECD Countries." In *Labour Rela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Brunetta R. and C. Dell'aringa (eds.), pp.114~136. Macmillan, 1990.

Rhodes, M. "Restructuring the British Welfare State: Between Domestic Constraints and Global Imperatives." In *Welfare and Work in the Open Economy*. Scharpf, F. and V. Schmidt (eds.), Volume II. Diverse Responses to Common Challenges, pp.19~68.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Sapir, A. "Globalis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s." Background Document for the Presentation at ECOFIN Informal Meeting in Manchester, 9 September 2005.

Scharpf, F., and V. Schmidt (eds.). *Welfare and Work in the Open Economy*. Volume I. From Vulnerability to Competitiv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Schmitter, P. "Sectors in Modern Capitalism: Modes of Governmance and Variations in Performance." In *Labour Rela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Brunetta R. and C. Dell'aringa (eds.), pp.3~39. N.Y : New York University, 1990.

Soskice, D. "Reinterpreting Corporatism and Explaining Unemployment: Coordinated and Non-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n *Labour*

Rela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Brunetta R. and C. Dell'aringa (eds.), N.Y : New York University, 1990.

Standing G. “Labour Flexibility and Insecurity: Towards an Alternative Strategy. In *Labour Rela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Brunetta R. and C. Dell'aringa (eds.), pp.439~468. N.Y : New York University, 1990.

Wilthagen, T., and F. Tros. “The Concept of ‘Flexicurity’: A New Approach to Regulating 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Trans-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10 (2) (2004): 166~187.

Labor Market Institu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K.,
Germany, and Denmark

Hyungkee Kim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countri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Denmark. First,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different labor market institutions, that is, flexibility in the U.K., security in Germany, and flexicurity in Denmark, are analysed. Next, a regression analysis is made to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such as employment protection, unemployment protection,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the economic performances such as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poverty rate, and Gini coefficient.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uggest that if flexible labor market is combined with high unemployment protection and high expenditures on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n it is possi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short, institution building for flexicurity of labor market can contribute to realize a sustainable growth.

Keywords : flexicurity, employment protection, unemployment protection, active labor market policy.